

제2차 전국워크숍 속기록

- 일시 : 2010년 2월 9일(화) 오후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자 : 30여명

[합의사항]

- ① 시민 지방연합정부구성(안)은 시민사회의 프레임, 담론화-여론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희망과대안 정책기획팀이 맡기로 함.
- ② “6.2지방선거대응 시민사회 간담회”의 명칭으로 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협의를 추진키로 함(필요시 수시)
 - 연합추진 단위와 유권자운동 기획단위 연석회의 개최하여 기획안 조정키로 함.
 - 전국적인 유권자운동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희망대안이 실무역할 담당함.
 - 시민사회 고유과제를 확장하는 기획을 더 논의키로 함.
- ③ 유권자 참여형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한 바, 워크숍에 참여한 지역 시민정치조직 연명으로 초안 만들어서 연명하여 발표하는 것 추진키로 함.
- ④ (가칭)서울유권자희망연대 계획 제안은 정치연합팀과 일차 협의 후 시작하기로 함.

<속기록>

1. 지역호름 보고 및 참석자 소개

- 고양, 경기, 원주, 풀넷 등

2. 5+4회의 호름 보고 및 질의응답 (발표 : 백승헌)

- 12월부터 연합논의 모색 시작. 정당간 협의와 지역간 협의 두 가지 호름 존재.
- 1월 12일 원로6인 초청간담회로 공식 논의 시작. 이후 비공개 가능성 모색 수준으로 시작. 현재까지 10여 차례 논의. 5당 주도. 4단위는 촉진자. 5당간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 시민단위 역할 중요.
- 선거라는 조건을 염두. 1월말까지 원칙에 대한 확인. 이후 협상 통해 틀을 만들고 각 당 논의 통해 실행. 논의의 기초를 확인해 나가는 시점. 느리지만 진척 중. 설

이전 메시지 논의 중. 이상적으로는 1월말까지 큰 틀. 2월말-3월초 틀. 이행시기 4월안. 5월13,4일이 등록. 일주일후 선거운동. 등록 이후는 연합 물 떠나.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연합도 가능.

- 포괄적 연합 목표(전국적,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교육선거도, 향후 대선까지) 가치연합(정책중심연합. 묻지마연합 안됨. 시민단위 역할 고려할 것 요구 중. 정책연합이 정치연합 방해하면 안 됨)
- 풀뿌리-시민후보에 대한 개방성 논의. 5정당 협의에만 맡길 수 없음. 적절한 시점 제기 염두. 지역에서 상향식 연합의 움직임 있음. 이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흐름 있음.
- 조정방식. 유권자참여형으로 진행. 공동지방정부 운영(민관협치의 측면에서 요구)
- 유권자운동 등 시민운동 고유의 운동을 통한 압력이 있어야.
- 지역별 흐름이 중앙당과 협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의원의 힘이 더 세. 기초의원 분할문제 시의회 권한. 기초지역에서 합의된다면 그대로 가자고 할 것. 조정이 잘 안 될 때의 원칙을 정하면 가이드라인 제공될 수 있을 것.
- 현행 선거법은 연합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제약 많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고민 중. 지역별 문의 민변에서 답변하고 있음. 지역 선관위는 보수적으로 판단. 지역상황에 따라 눈치 봄. 다양한 사례 올려주어 모아서 공동대응 모색.
-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논의진행 될 것. 기초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어. 그래서 중앙 논의 한계 있지만. 전체 지역구 모두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원칙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지역에서 조정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전략공천 가능하게 규약 개정. 진행 잘 된다면 정책협상단위도 있어야 하고, 광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협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런 문제점 완화할 수 있을 것. 단체장 선거로 갈수록 경쟁력 필요. 기초로 갈수록 정치적 합의 무시 못 할 것.
- 2010년 사례는 향후 지역에서의 연합정치 적용의 기준점이 될 것인 바, 매우 중요함.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 시민사회가 우리의 선택지 등 창조적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봄. 유권자 참여형 연합정치의 사례를 잘 만들어야 할 것. 선거에 직면해서는 후보연합 문제에 천착하게 될 수밖에 없음. 결국 힘으로 강제될 것.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치를 남겨야 함.
- 정책연합 : 우리의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정당간 차이를 진일보하게 묶어내야...
- 참여연합 :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 동력 형성과 도약의 계기....
- 원칙이나 합의문안 너무 많이 만들면 합의 깨질 수 있어. 중앙당 지도부 힘 약해. 5+4가 활동범위 빨리 확정해야. 호남은 그냥 두자.(전략공천 빼고) 지방 5+4 만들어야, 목표를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그러나 중앙의 협의는 포괄적일 수밖에. 그러나 제외해 나갈 것. 지방에 맡길 것은 지방에. 원칙 합의와 더불어 지역으로 이양되는 것 필요. 이런 논의가 깊어지고 있어.

3. 지역 시민연합정부 구성(안) (발표 : 김달수)

- 기존의 지자체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모델,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 필요함. 울산의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어떻게 다른지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음. 시민사회의 개입의 차별화가 가능할 마케팅 방안 등 공동 모색 필요함.
- 정당간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적 내용, 조직적 내용 등이 있다면 시민연합정부로 표현? 고양의 경우 야5당+시민사회라 다 받을 수 있겠고,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 20개는? 시민사회 영향력 강한 곳. 성공 가능한 곳 있다면 미리 시민사회서 제안 필요할 것. 현재는 특수 상황. 지방토호세력과 나눠먹기식으로? 옳지 못하다. 오해 소지 많다. 산하기관 공동추천도 낙하산식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
- 관건이라 할 연합정부의 책임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은 고민이 필요함.

4. 광주 희망과대안

- 지역에서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상에 대해 고민이 있음. 좋은후보 25명 정도를 추천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중임.

5. (가칭) 2010 서울 유권자희망연대

- 5+4회의 선거연합 추진과 충돌하는 모양새 ? ==> 합의 절차와 과정에 시민참여, 시민검증 통한 국민적 공감대 실현, 유권자 운동 독자성 측면에서 기획된 것임.
- 협의가 진행 중이고 운동이 진행 중인 투 트랙을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 있을 듯. 구체화되거나 선언되기 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함.
- 현실성의 문제가 있고, 5+4와 다른 트랙임.
5+4에서 합의가 될 경우, 정책협약과 투표참여운동 전개하면 됨.
반면, 5+4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대비하는 측면 (오픈 프라이머리)
시민배심원제 방식 등 프로세스 가동...

6. 종합토론

- 시민과 유권자를 조직하는 방식이 결합되지 못하면 힘을 받지 못할 것. 자기후보도 아니고, 나온 사람 중 한명 선택하는 유권자운동(가장 소극적인 방식임)이 가능 되겠냐? 5+4 상층 논의만으로는 국민참여나 지지 획득 불가능할 것. 즉 시민연합정부 등 상과 목표가 먼저 제시되고, 이를 위해 선거연합 실현한다는 이런 단계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지역과 중앙 5+4가 어떻게 연계할지 ?
- 연합론과 유권자운동이 모순되면 안 됨. 선거연합 촉진을 위한 유권자운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기의 계획과 구상이 필요함.
- 지방선거 중요, 정당에 맡겨 놓았을 때 선거연합 등 실패할 우려 큼. 유권자운동

이 결합되지 않으면 선거연합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유권자운동을 기획해야 함. 수도권 광역선거에서의 유권자운동 대응계획 현재 없음. 여러 허점과 한계가 있음(지난한 논의과정 있었음)에도 시작하자는 것임. 기층 결합 유권자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끌어 낼 거냐? 가 고민임.

- 유권자운동의 여러 방식 중 '후보'의 문제는 충돌되는 지점 있음.
- 상층 선거연합 논의를 백업하고 공유하고 힘을 줄 유권자운동도 취약, 지역과 중앙의 연계도 취약한게 문제지점이 되고 있음.
- 대전, 인천 등에서 교육감 선거대응 조직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시장선거 대응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있음. 교육을 중심으로 할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가능할 듯, 교육으로 전국적인 벨트를 묶고, 확장하는 것도 방안. 교육단체에 위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결합. 시민운동진영의 교육감선거대응도 의제로 올라야 함.